사회조사방법론

김현우, PhD¹

1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

진행 순서

- ❶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
- ② 사회적 규칙성
- ③ 결정론과 주체적 행위
- ◑ 실제 연구 사례

사회학의 과제는 사회 세계를 "말이 되도록" 설명하는 것이다.

- 초기 실증주의(early positivism)에서는 "사회는 합리적으로 연구되고 이해될 수 있다"라는 명제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.
- 그런데 사회세계를 "합리적으로" 설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? 이때 서로 다른 질문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.
- 사회세계의 구성원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. 하지만 연구방법은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.
- 인간의 "인식과 행동이 비합리적인 것"과 "(그것에 관한) 연구방법이 합리적인 것"은 다른 영역의 질문이다(Why?).
-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.



다만 방법론적 합리성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.

-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른 투표의 역설(paradox of voting): "사람들은 왜 투표를 할까?"
- 사회심리학은 비합리적 인식과 행동을 (합리적 선택이론은 아니지만 다른)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.
- Asch 실험(오답 실험), Muzafer Sherif의 자동운동효과(autokinetic effect) 실험 등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비합리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(Babbie 2022: 61-64).



- W. I. Thomas와 Florian Znaniecki는 "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어떤 상황, 질서, 원리가 실재한다고 정의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 그것은 실재한다"고 주장한다.
- 사회는 상호주관적(inter-subjective)인 실제이다.
- 사회적 구성주의(social constructionism)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적 규범, 질서, 원리 따위는 객관적 실제(objective reality)라기보다 단지 "사회적 구성물"임을 지적한다.







'정당화'라는 비합리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

- Pamela Tolbert와 Lynne Zucker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사이의 미국 시정부 행정개혁(civil service reform)의 확산을 연구하였다.
- 그들은 초기에는 시정부의 성격과 개혁안 채택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나중에는 시정부의 성격과 개혁안 채택시점 사이에 별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.
- 이는 행정개혁의 확산이 합리적인 판단과 수용의 결과가 아니라 (특히 나중일수록) 적당히 흉내낸 결과임을 시사한다.
- 사회적 구성물로서 행정개혁을 정당화(legitimation)라는 개념을 통해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개혁의 확산과 수용도 "합리적으로" 설명할 수 있었다.

Tolbert, Pamela S. and Lynne G. Zucker. 1983. "Institutional Sources of Change in the Formal Structure of Organizations: The Diffusion of Civil Service Reform, 1880-1935."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(1): 22-39.



Table 2

Proportional Hazards Model of Civil Service Adoption over Time, 1885–1935

Time period		Percentage foreign- born	Percentage illiterate	Manufacturing wage earners†	Municipal expenditure	Log est size	Age	-2 log 1	Model chi-square	Model D
1885-1904 (N = 83)	B SE exp(B)	.114*** .040 1 120	*	- 406*** .888 .666	-1.657 910 .191	.487° .326 1.627	.009 016 1.009	63.27	15.52 (p < 008)	.51
1905-1914 (N = 74)	B SE exp(B)	056 ^{••} .027 1.058	069 .079 .933	070 550 .932	.034 .661 1.035	383 ° 249 1.467	.0001 008 1.000	175.67	15.77 (p < .02)	.35
1915-1924 (N = 52)	B SE exp(B)	.029 .030 1 029	279** .127 757	569 863 1.766	299 1.267 1.349	.325 .428 1.384	.016 .013 1.016	104.07	10.38 (p < ,11)	.35
1925-1934 (N = 39)	B SE exp (B)	.021 .040 1.020	- 006 .171 .994	296 .742 .744	-1 361 1.734 256	766 .651 .465	010 .016 .990	57.25	2.04 (p < 50)	.17

[•]p < .01; ••p < .05; •••p < 10 *Excessive missing data, no reliable estimate possible.

[†]Residualized on city size.

사회조사방법론은 사회적 규칙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.

- 어떤 사회든지 놀라울만큼 일관된 나름의 사회적 규칙성(social regularities)이 발견된다.
- 때로는 법적 규제에 따라 사회적 규칙성이 나타난다. 예를 들어, 한국의 아동은 "6 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"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.
- 그러나 때로는 전혀 법적 규제 없이도 규칙성이 나타난다. 예를 들어,
 (1) 올해의 출산률은 (비록 증감이 있지만) 작년의 출산률로 잘 설명된다.
 (2) 작년과 올해의 출산률 증감은 작년과 재작년의 출산률 증감으로 잘 설명된다.
- 심지어 몇몇 종류의 규칙성은 전세계적인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. 가령 많은 사회에서 직업 위세(occupational prestige)가 발견된다.



때로 발견된 사회적 규칙성이 너무 시시하거나 당연한 내용으로 여겨진다.

- "2021년 입시기간 동안 40만 개의 트윗을 분석하여 대학 위세 점수를 추정한 결과, 1 등은 서울대, 2등은 연세대, 3등은 고려대로 확인되었다."
- 하지만 많은 경우 평범하다는 인상이 그저 현재의 (특정 위치에서 형성된) 편견을 반영하기도 한다. 그것이 "내 주변의 상식"을 넘어 진정 참인지는 조사해 보아야 알 수 있다.
- "내 주변"은 선별적 관찰과 연결되어 있다.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. 이를 유유상종의 원리(the principle of homophily)라고 부를 수 있다.
- 편의 관찰(casual observations)에 따른 오류가 여기에서 유래한다.
- 이런 편의 관찰에서 나타나는 왜곡(bias)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 조사연구는 백년 가까이 노력을 기울여왔다.



심지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식이 틀린 것일수도 있다.

- "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" 라는 주장은 한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지식이였다.
- "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."
- "진급이 빠른 부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그렇지 않은 군인보다 사기가 높을 것이다?"
- 당연한 것으로 기대한 현상이 "의외로"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큰 이론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.
- Robert K. Merton과 Samuel Stouffer의 준거집단이론(reference group theory)은 그 이론적 산물 중 하나이다.



일견 평범한 명제를 파헤치면서 사소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다.

- "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보수 정당보다 진보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."
- 하지만 진보 성향의 유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.
- 진보 성향 유권자는 진보 정당을 여전히 지지하지만, 여기서 배출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."
- 그러므로 위의 자명한 명제를 더 깊게 탐구하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보조적 사실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.



- "진보 성향 유권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기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."
- "진보 성향 유권자라고 해도 (경제나 외교 등) 특정한 정책 이슈에 따라 보수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."
- "진보 성향 유권자는, 특정 후보를 내세운 진보 정당 간부(cadres)에 반대 의사를 보여주기 위하여, 타정당 후보를 찍을 수 있다."
- "진보 성향 유권자는 비판적 지지의 형태로 불만이 있어도 진보 정당에 투표할 수 있지만(loyalty), 진보 정당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도 (voice), 선거에서 기권하거나 타 후보를 선택할 수도(exit) 있다."



- 이러한 연구는 (예를 들어) 저항투표(protest voting) 개념과 이론에 기여할 수 있다.
- "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, 어떤 상황에서 가까운 정당에 항의하거나, 기권하거나, 심지어 타 정당 후보를 선택할까?"
- 평범하다는 지적에 해당 주제를 너무 성급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.
- 좋은 연구는 작고 평범하게 시작하여 크고 비범하게 끝낸다. 반대로 말해 용두사미 (龍頭蛇尾), 즉 시시한 엔딩은 아무래도 좋지 않다(Why?).



사회적 규칙성에 관한 흔한 오해가 있으므로 주의하자.

- 사회학은 얼핏 보기에 마치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와 동기처럼 설명되던 것들을 사회적 규칙성으로 다시 설명한다!
- 한 사람이 겪은 일을 두고 나름의 논평을 할 수는 있다. 그러나 이것이 진지하고 체계적인 사회학적인 연구라고는 하기 어렵다.
- Emile Durkheim의 〈자살론(Suicide)〉은 사회적 사실(social fact)로서 자살률 (suicide rate)을 설명하고자 할 뿐, 베르테르(Werther)같은 한 인간의 구체적 자살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.
- "자살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그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인 것 같다."
-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와 동기를 이해하고 상담·치료하려는 학문은 임상 심리학 (clinical psychology)이다.



- 당연히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 소수의 예외(exceptions)를 제시한다고 해서 체계적 사회조사의 결과가 부정되지도 않는다("아닌데? 내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던데?").
- 양적 조사연구의 근간에는 이른바 확률론적 사고(probabilistic thinking)가 자리잡고 있다.
- "조건 X가 성립할 때 결과 Y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"는 명제는 "조건 X가 성립할 때 결과 Y가 나타난다"라는 결정론적 사고(deterministic thinking)와 큰 차이가 있다.
- 한두 건 예외가 나타나더라도 기존 사회조사의 연구 성과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

사회현상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1차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?

• 사회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구도로 설명해왔다.

결정론(determinism) 주체적 행위(agency) 전체론(holism) 개체론(individualism) 구조주의(structuralism) 실존주의(existentialism)

•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다른 분류 체계도 있다.



결정론은 개인보다 구조를 앞세워 설명한다.

- 결정론(determinism)에 따르면, 사회 현상은 사람을 둘러싼 구조(structure)와 맥락 (context) 속에서 잘 설명될 수 있다.
- "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식한다는 허울좋은 해방구조차 그 대본은 이미 짜여져 있다."
- "개인이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한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만든다는 이야기와 같다(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)."
- "인간이 그토록 완전히 자유롭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선택과 의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?"



행위론은 사회보다 개인을 앞세워 설명한다.

- 행위론(agency)에 따르면, 사회 현상은 사람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잘 설명될 수 있다.
- "구조나 맥락은 단지 제약조건(constraints)일 뿐,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."
- "사람이 구조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면 역사 앞에서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하는가?"
- "결정론자들은 대체 어떻게 사회현상과 사회구조에 관해 (그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은) 참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가?"



- 개인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방법론적 개체론(methodological individualism), 사회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방법론적 전체론(methodological holism)으로 부를 수도 있다.
- 방법론적 개체론에서는 개인의 선호(preference), 신념(belief), 선택(choice), 물질적/비물질적 자원(resources) 등을 우선시한다. 개인들의 단순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발적 속성(emergent property)을 가진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.
- 방법론적 전체론에서는 사회의 (개인의 선택 등으로 환원될 수 없는) 제도 (institutions), 체제, 규범(norm), 문화(culture) 등을 우선시한다.



결정론과 행위론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.

- "행위론은 사람의 선택이 자유롭고 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부적절하다."
- 그렇지 않다. 설령 주체적 행위론을 받아들이더라도 사람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제약되어 있음을 인정한다.
- "(별의 움직임과는 달리) 사람은 "의식할 때" 규칙성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."
- 그렇지 않다. 애초에 사회학 연구는 한 개인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. 사회학이 설명하려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성이다.
- 그러므로 그 혼자서 (오로지 사회적 규칙성을 깨기 위한 의도에서 패널티를 각오하고) 벌인 행동은 이해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다.



• 출산율(Babbie 2022: 19)이라는 사회적 규칙성은 결정론과 행위론의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?

연도	여성(15~50세) 천 명당 출생률
2006	54.9
2007	55.0
2008	58.5
2009	57.0
2010	54.6
2011	54.0
2012	54.1
2013	51.6



사회학자들은 나름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도 했다.

- "행위자(agent)로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규칙성에 관한 과학지식은 행위자의 의지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. 그러므로 처음 예측한 사회적 규칙성은 결국 조금씩 변화한다."
- 또한 (하나의 시도로서) "사회적 규칙성에 관한 설명"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규칙성의 변화에 대해 성찰적(recursive)으로 다시 조사연구할 수 있다.



- "여당(또는 야당)에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는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?"
- "파생상품의 가치평가에 관한 Black-Scholes-Merton 모형에 근거하여 설립된 Long-Term Capital Management (LTCM)는 1993년 설립 직후에는 승승장구하였으나, 1998년 금융위기 속에서 금방 파산하고 말았다."



Robert C. Merton



Myron Scholes



Fischer Black



- 어떤 사회학자들은 개인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사회적 규칙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. 개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. 엉뚱한 타인을 탓하며, 지극히 개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지적한다.
- 사회학에서는 아무래도 행위로 보다는 결정론의 시각이 좀 더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.
- 그러나 사회적 규칙성을 "같은 제약 조건 아래 (반복된) 합리적 선택의 결과"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(Why?).
- 어떤 시각을 택하는가는 여러분의 몫이다. 다만 일관시켜야 한다! 그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자.
- 책과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자. 납득할 수 있을까? 혹시 같은 주제를 반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는 없을까?



기존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초 지식을 먼저 검토하자.

- 낙인 이론(labeling theory)은 사회학 이론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 (symbolic interactions)으로부터 파생된 설명이다.
- 낙인 이론에 따르면 비행(deviance)이나 범죄(crime)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. 이는 사회가 특정 행동이나 사람에게 부여하는 낙인(label) 때문에 나타난다.
- 마치 자기실현적 예언(self-fulfilling prophecy)처럼, 사회적 반응은 개인의 정체성 (identity)을 (재)구성하며 이는 다시 특정 행동으로 이어진다.



- 특정 계층이나 집단(e.g., 한센병 환자, 흑인, 게이 등)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.
-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도 있다.
- 반대로 낙인이 없으면 쉽게 벗어난다(e.g., 백인 청소년의 마리화나).
- 하나의 낙인은 무관한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강화한다(e.g., 편모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절도).



주체적 행위를 강조한 실제 연구를 살펴보자.

- 김중곤(2022)은 청소년의 낙인 과정과 비행 친구와의 교제 과정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았다.
- 낙인은 특정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, 이렇게 고립된 청소년은 (낙인을 공유하는) 다른 비행 청소년과 어울린다.
- 비행 청소년들의 그룹은 낙인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일종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며, 이것은 다시 낙인을 강화하고 실현한다.

〈표 4〉 인지한 비공식 낙인의 비행에 대한 효과 및 매개과정 분석

	모형1(기본모형)		모형2(매개모형)	
	b	S.E.	b	S.E.
차수수준(1수준, 개인 내)				
인지한 비공식 낙인(t-1)	0.025*	0.011	0.011	0.011
차수(t)	-0.425***	0.012	-0.449***	0.012
비행친구와의 교제(t)			0.041***	0.002
개인수준(2수준, 개인 간)				
인지한 비공식 낙인	0.369***	0.046	0.244***	0.048
차수(개인별 평균)	0.047	0.135	0.129	0.139
성별(남성=1)	0.664***	0.105	0.502***	0.106
이전 비행수준	0.577***	0.042	0.463***	0.044
비행친구와의 교제			0.052***	0.011

주. *p<.05, **p<.01, ***p<.001, N=14,564(1수준), 2,719(2수준).

김중곤. 2022. "비공식낙인이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비행에 미치는 영향: 낙인이론의 부분적 검증." 『청소년학연구』 29(3): 163 186.

결정론적 관점의 기존 연구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초 지식을 먼저 살펴보자.

- 한국 뿐 아니라 의외로 전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불안한 일(precarious work)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.
- 많은 사람들이 능력주의(meritocracy)를 대안으로 받아들인다. 즉 "열심히 하면 성공한다."
-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라면 하나의 예측을 내놓을 수 있다: "사회 이동(social mobility)은 열려있다."
- 만일 한국 사회가 열린 사회이고,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(stomping stone)일 뿐이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. 과연 그럴까?



• 지은정(2007)의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디딤돌이라기보다 트랩에 가깝다.

〈표 6〉 근로능력계층의 노동시장이동 Markov 이행확률

				1 E (121a)	E			
구 분			노동시장이동					
			4차					
	'		내부	외부	근로빈곤	집단간 차이검증		
3차	내부	507명(100%)	525%(266명)	46.9%(238명)	0.3%(3명)	.000***		
	외부	2,114명(100%)	7.8%(164명)	86.0%(1,819명)	6.2%(131명)			
	근로빈곤	252명(100%)	_	44.4%(112명)	55.6%(140명)			
	소계	2,873명	373명					
7. 14			노동시장이동					
구 분		5차						
	내부	434명(100%)	66.1%(287명)	33,2%(144명)	0.7%(3명)			
(=)	외부	2,190명(100%)	10.3%(226명)	75.1%(1,645명)	14.6%(319명)	000888		
4차	근로빈곤	283명(100%)	0.7%(2명)	26.1%(74명)	73.1%(207명)	.000***		
	소계	2,907명						
구 분			노동시장이동					
			6차					
5차	내부	519명(100%)	65.3%(339명)	34.5%(179명)	0.2%(1명)			
	외부	1,849명(100%)	9.0%(167명)	81.9%(1,515명)	9.0%(167명)	.000***		
	근로빈곤	541명(100%)	0.6%(3명)	32.3%(175명)	67.1%(363명)			
	소계	2,442명						

^{***} p< .001

지은정. 2007. "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: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." 『한국사회복지학』 59(3): 147-174.